
OGP 제3차 국가실행계획(안)

2016. 10.



목 차

I. 서론	1
II. 열린정부 구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성과 ...	3
III. 실행계획 수립 과정	10
IV. 이행과제	12
V. 실행 방안	21
[붙임] 이행과제별 세부내용	22

I 서론

현재 각국 정부는 저성장, 높은 실업률, 저출산, 고령화, 정부 신뢰 저하 등과 같은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전통적으로 인식되던 정부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업무 수행 방식과 범위에 대한 폭넓은 변화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한국 정부도 예외는 아니며, 정부 혁신을 핵심 국정 아젠다로 설정하고 보다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UN 전자정부평가에서 3회 연속 1위에 오르는 등 공공서비스의 전자적 제공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 역시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국정 운영의 기반을 공고하는 것을 국정 목표로 삼아 정부의 개혁과 쇄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정 과제 중의 하나로 제시된 신뢰받는 정부는 여타 국정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실질적 토대로 작용하는 추진 기반에 해당한다.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추진과제로 국민 중심의 정부3.0 구현, 부적절한 규제 사전 예방 및 규제 합리화,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정부3.0 이니셔티브는 전자정부 등 그간 이룩한 정부 혁신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핵심 가치로 하는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국정 운영 전반에 도입·확산 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3.0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 정부는 공공 정보와 데이터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개방하는 한편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과 실천적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투명성 증진, 정부의사결정 과정에의 시민 참여, 부패 방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거버넌스 확립 등 OGP가 추구하는 열린 정부의 가치에도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나 인도네시아 등 일부 OGP 회원국들과 같이 열린 정부 계획이나 이니셔티브를 별도로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지는 않으며, 정부3.0 이니셔티브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과 계획을 통해 열린 정부 구현에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OGP 가입 이후의 1차 및 2차 국가실행계획(National Action Plan; 이하 NAP)도 이러한 환경 하에서 수립·추진되어 왔으며, 3차 NAP 역시 정부 투명성, 시민 참여 증진, 청렴성 제고, 거버넌스 강화 등 열린 정부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계획과 프로그램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한국 정부의 OGP 활동 참여는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객관적인 기준의 준수와 개선 권고를 통해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과제들이 마련되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열린정부 구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성과

OGP 가입 이전에도 한국 정부는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정예의 시민 참여 기회를 점차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OGP 가입과 정부3.0 이니셔티브 추진 등을 계기로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며 일부 가시적인 성과들이 구체화되는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

OGP 활동의 핵심을 구성하는 NAP의 수립·이행·평가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1차 NAP에서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등 3개 영역에서 실시간 원문공개,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민·관 협치 강화를 위한 소통채널 추진,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과 정부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한 협업·소통, 그리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와 정보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IT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 8개 이행과제(공약)를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제2차 NAP는 공공서비스·행정 청렴도·공공자원의 효율적 관리 개선 등 3개 영역에 총 5개의 이행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민-관 협치 강화, 수요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보공개 고도화, 공직자 윤리 강화,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 등이 그것이다. 제2차 NAP 추진을 통하여 이루어진 주요한 활동과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보공개 고도화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제고와 정책참여, 공직부패 방지와 책임성

확보, 투명한 행정을 통한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는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 과제에 해당한다. 이에 한국 정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였고 1998년부터 이를 시행하였으며,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공공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도 구축·운영하였다. 그러나 정보공개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정보시스템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보공개가 소극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방식은 2013년 발표된 정부3.0 이니셔티브 추진을 계기로 전면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하여, 국민중심으로 정보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설정하고 기존의 공급자위주에서 국민중심으로, 소극적 공개에서 적극적 공개로 정보공개방식의 전환을 추진한 것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우선 기존의 정보공개법을 전면 개정하였는데, 원문사전공개 근거마련,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범위 확대, 정보공개이의신청 및 통지절차 개선, 정보공개청구권 강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제도 개선과 더불어 정보공개의 양적 확대도 추진되어 2013년 현재 33만 건에 불과하던 정보공개건수를 매년 1억 건씩 늘려 2017년까지 약 7.7억 건의 정보공개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공개 가능한 정보는 정보 생성 단계에서부터 공개가 가능하도록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개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까지 이를 도입·적용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14년 48개 중앙행정기관으로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2015년에는 157개 지방자치단체와 17개 교육청 및 176개 교육지원청, 그리고 11,446개 각급 학교에 확산되었으며 2016년에는 116개 공공기관에 동 시스템의 도입이 완료되었다. 2016년 6월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원문정보공개율은 45.7%이며, 지방자치단체는 69.9%, 교육청 32.2%, 공공기관은 42.7%에 이르고 있다. 정보공개와 더불어 정보공개의 충실성 및 적절성, 수요자 편의성 등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학계, 시민단체, 일반국민 41명 등이 참여하는 정보공개 국민점검단이 구성·운영되었다. 정보공개 국민점검단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6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내용의 충실성 및 현행화 정도, 정보공개 처리과정의 편의성 등을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는 각 기관에게 통보되었고, 기관별 정보공개 운영 개선에 반영토록 하였다.

②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활성화

공공 정보와 함께 공공데이터 역시 국민과 기업에게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됨으로써 정부 정책에 관해 충분한 분석·이해·판단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정책결정의 효율성 확보는 물론 정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 기업, 정부 등 광범위한 주체에 의한 공공데이터의 활용은 민관협력의 창의적 서비스 창출로도 연계가 가능하다. 공공데이터가 갖는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OGP 회원국들은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중요 이행과제로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선정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도입·적용하고 있다. 2013년 제정·시행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자의 지정·게시, 공공데이터목록의 작성·등록·공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포털에의 등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부가가치 있는 공공데이터가 우선 개방될 수 있도록 중점 분야를 지정하는 등 연차적으로 개방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를 통해 민간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규비즈니스를 확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서비스 사례가 나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국내 스마트폰용 운전자 길안내 애플리케이션인 ‘김기사’이다. ‘김기사’는 교통정보, 주소정보, 도로이정표 정보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이다. 이 앱은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사용할 만큼 인지도가 높을 뿐 아니라, 626억 원에 대기업에 인수되었다. 또 하나의 예로는, 위치기반으로 병원정보를 검색하여 주는 서비스인 ‘굿닥’이 있다. 이 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정보서비스, 약국정보서비스의 오픈 API를 활용하였다. 굿닥은 사업영역을 점차 넓혀 고용인원을 창업 전에 비해 20배 높여 고용창출의 효과를 보았다. 한국 정부는 공공데이터 법제도 정비, 개방 기반 마련 및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활성화 등 다방면의 노력을 통하여, 2015년 7월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

③ 수요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공급자 중심의 일률적인 서비스로는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없으며 이는 공공서비스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동일한 수요자라 하더라도 놓인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때 제도 수용성과 정부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요구 변화에 맞추어 수요자 관점에서 정부의 각종 정책과 서비스를 국민 개개인의 특성과 유형별 요구(needs)에 맞게 재설계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공공서비스 목록을 관리하고 국민이 신청하는 경우 상황에 맞는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신청 받은 공공서비스를 해당 기관에 즉시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2014년 7월 「전자정부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국민은 수혜 가능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종합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각 기관의 정책·사업·서비스가 맞춤형 형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2014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서비스 50개를 선도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통신요금 종합포털인 ‘스마트 초이스’,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6개 분야의 주력사업 개발을 완료하였다.

④ 공직자 윤리 강화

공직자 윤리는 다양한 측면을 통해서 확보되어야 한다. 즉 공직 취임 이전에서부터 공직 재직 중, 그리고 퇴직 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공직윤리가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부패문제나 윤리문제에 관한한 주로 결과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제도의 형성이 감시(감사), 적발, 처벌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 부패 발생 이전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직윤리가 보다 강조되고 있다.

퇴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연고주의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중요시하는 문화적 풍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전관예우의 문제, 퇴직공무원의 로비스트화 등 공직자와 영리사기업체의 유착가능성을 방지하고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공직자가 재직시 알게 된 정보는 특정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특정기업에 취업이 예정된 경우에도 미리 현직에서 미래의 기업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상존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공익의 손상은 물론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근거한다. 한국 정부는 공직 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 제도의 시행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2014년 「공직자 윤리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대표적인 개정내용으로 취업제한기간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와 고위공직자의 취업심사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확대 등을 통하여 공직자의 취업심사를 한층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그 결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율이 2013년 8.3%에 그쳤으나 2014년 19.6%를 기록하였고, 2015년에는 20.8%로 대폭 상승하였다.

⑤ 민·관 협력 증진

국민의 관점을 반영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며 국민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정부운영방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OGP가 표방하는 핵심가치에 해당한다. 정부가 단독으로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거나 국정운영에 전문가 등 국민 일부가 참여하는 제한된 의견 수렴을 거치는 것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정책 제안에서부터 결정, 집행,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다양한 국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국민제안의 제출·심사,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포상 등 제안 제도의 일반적 절차 등을 규정하는 국민제안규정과 행정과정의 국민 참여 확대노력 및 전자적 정책토론 실시 등을 규정한 「행정절차법」을 두고 있다. 국민신문고는 대표적인 온라인 참여 플랫폼으로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제안·신고와 정책토론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하며, 모든 행정기관(중앙·지자체·교육청·해외공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밖에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생활공감 모니터단, 1365 자원봉사 포털 등이 운영 중이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문가 그룹, 공청회, 토론회, 주민감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참여 채널이 운영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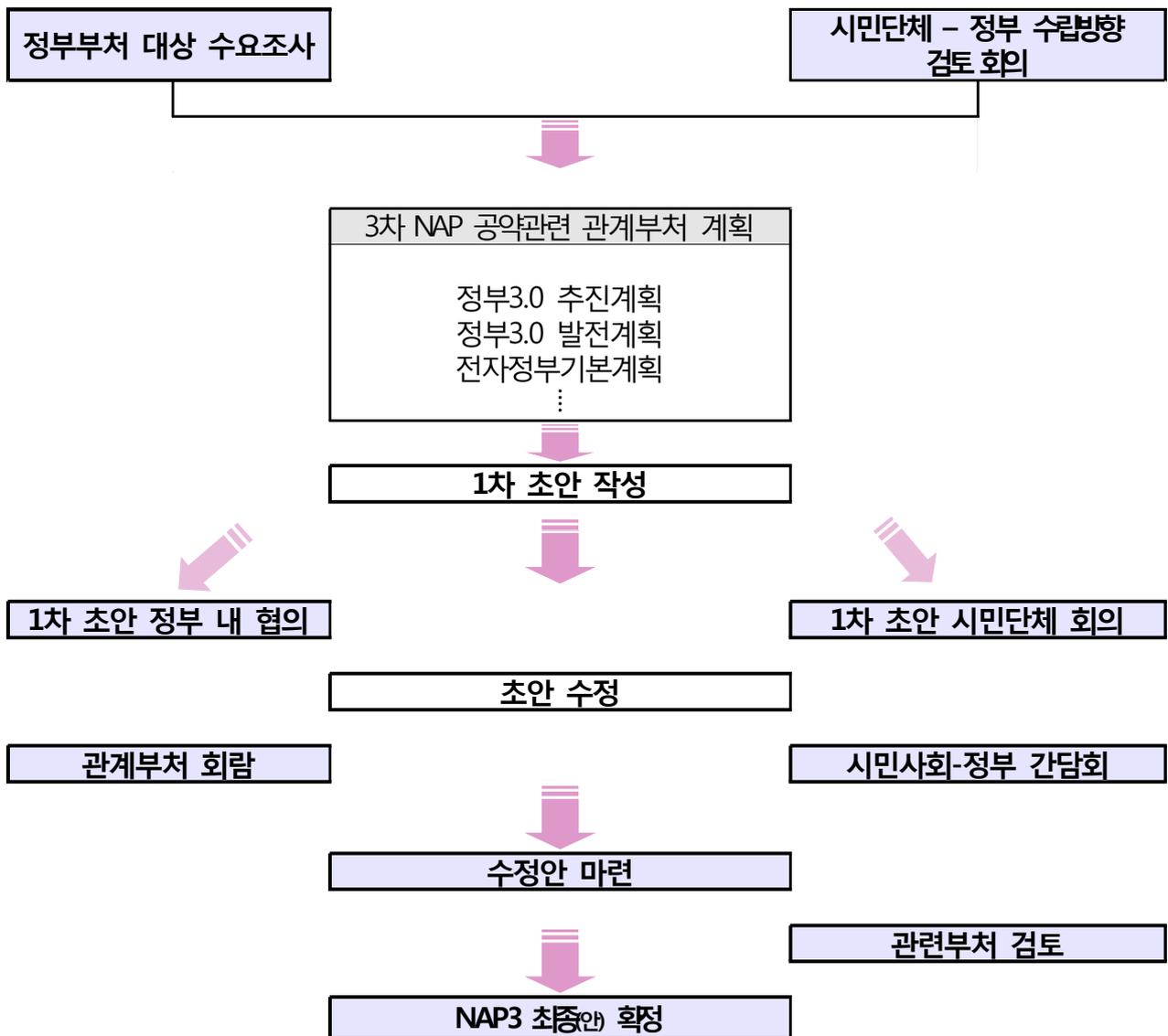
III 실행계획 수립 과정

지난 2차례의 NAP 수립과 이행 및 평가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정부 내 관련 부처 그리고 정부와 민간부문 간 협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정부 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민간 시민단체들이 3차 NAP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고 실제로 공동 노력을 통해 계획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들이 OGP와 OGP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간 이루어진 제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3차 NAP에 반영할 수 있는 이행과제에 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 내 OGP 활동을 주도하는 시민사회 단체와 한국 정부의 OGP 활동 전반에 대한 검토와 향후 활동방향 정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3차 NAP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과 내용 설명하였으며, 시민사회 단체도 3차 NAP에 포함되기를 희망하는 이행과제를 제시하였다.

3차 NAP 수립을 위한 정부 내 수요 조사 결과와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의 내용, 그리고 정부3.0 이니셔티브 등 한국 정부가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다양한 형태의 정책과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차 NAP 초안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초안에 대해서는 정부 내 관련 부처에 회람을 실시하여 이행과제의 OGP 가치에의 적합성 여부, 주요 내용과 일정계획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특히

시민 사회 단체가 제시한 의견들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3차 NAP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과제, 정부 내 협의가 더 필요한 과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과제 등으로 구분하고 이 중 3차 NAP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과제와 정부 내 협의 결과 이행과제로 반영할 수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3차 NAP 초안에 이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3차 NAP 초안은 시민 사회 단체와의 간담회와 일반 국민 대상의 온라인 방식의 의견 수렴과정, 그리고 관련 부처들의 최종 검토를 거쳐 확정되었다.



IV 이행과제

한국 정부의 제3차 NAP는 공공정보의 적극적 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시민참여 등 6개 주제로 구분될 수 있으며 총 14개 이행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행과제 중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 기관 확대 등 3개 과제가 계속과제이며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이용활성화 등 11개 과제가 신규로 포함되어 있다.

2016-2018 이행과제 목록

주제	이행과제	OGP 가치*				신규	계속
		1	2	3	4		
1. 공공정보의 적극적 공개	1-a.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 기관 확대						√
	1-b. 국민체감형 원문정보 지속적 발굴·제공						√
	1-c.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이용 활성화					√	
2. 공공데이터 개방	2-a. 고수요·고가치 국가 중점데이터 조기 개방					√	
	2-b.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 추진					√	
	2-c. 가공·활용이 자유로운 오픈포맷 확대					√	
	2-d. 개방표준 제·개정 및 적용 확산					√	
3. 시민참여	3-a. 국민 디자인단 운영 활성화						√
4. 기술과 혁신을 통한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	4-a.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4-b. 대국민 서비스포털 통합					√	
	4-c. 대국민 서비스 알리미 앱 개발·제공					√	
5. 반부패 및 공직윤리	5-a.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강화					√	
6. 재정투명성 제고	6-a. 국제원조 정보 공개					√	
	6-b. 대국민 ODA 통계정보 접근성 제고					√	

* 1) : Access to information 2) Civic participation, ; 3) Public accountability ; and 4)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openness and accountability

① 공공정보의 적극적 공개

1-a.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 기관 확대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온라인을 이용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립대학교 등 일부 기관들은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불편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290개 사립대학교를 대상으로 2016년 10월부터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며, 사립학교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 교육실시를 추진한다.

1-b. 국민 체감형 원문정보 지속적 발굴·제공

정보공개 양적 확대가 이루어짐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에게 유용한 원문정보의 지속적 발굴·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2016년에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에게 유용한 원문정보를 취합·선정할 계획이며, 원문정보공개에 관한 Best Practice 사례를 전파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1-c.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이용 활성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국민생활 밀접정보, 대규모 예산 사업 정보, 행정감시 정보를 사전에 주기적으로 공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각 기관이 통일된 기준 없이 주관적으로 정보를 선정·공표

함으로 인해 공공정보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사전공개를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한 공표목록과 세부항목 묶음에 해당하는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은 개발·보급하여 기관별 공표정보 건수 상향 평준화, 질적수준 제고 등을 꾀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공표 이행율이 평균 49.6%로 저조한 수준에('15.12월 기준) 머물러 있다.

② 공공데이터 개방

2-a. 고수요·고가치 국가 중점데이터 조기 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 정부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시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협력 컨트롤 타워로서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그리고 시민단체와 언론계, 산업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사회·경제적으로 개방효과가 큰 36대 분야를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로 선정하여 정보수요자에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15년까지 건축물정보, 지자체 인허가정보, 상권·부동산정보 등 11개 분야의 개방이 완료되었으며, 2016년까지 식의약품종합정보등 22개 분야의 개방이 추진된다. 국세, 사회보장, 판결문 등 3개 분야는 단계적 개방이 추진될 예정이며, 국민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대학진학률, 식품방사능수치, 특허-상품 연계정보, 지식재산권정보 등 42개 데이터에 대한 추가 개방 노력도 진행될 계획이다.

2-b.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 추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더불어 공공데이터 품질제고를 통한 민간 활용성 제고도 함께 추진된다. 지속적으로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기관별 데이터 품질관리 프로세스 수준을 평가하여 기관이 자발적으로 품질강화를 위한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국가중점데이터 및 민간활용이 우수한 21개 DB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한다. 2016년 21개 DB에서 2017년 42개 DB로 평가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며, 2018년부터는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데이터에 대해 품질관리 수준평가가 이루어진다.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우수인력 선발·교육을 통한 전문심사원도 매년 양성할 계획이다.

2-c. 가공·활용이 자유로운 오픈포맷 확대

데이터를 자유롭게 가공·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을 위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제공하는 오픈포맷을 확대하여 데이터 활용성 증대 노력도 이루어진다. 기존의 가공이 불가하거나, 특정 소프트웨어에서만 구동되는 데이터는 데이터 갱신시 오픈포맷으로 전환하고, 신규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등록하는 경우 개방도 3단계 이상으로 심사기준이 강화된다. 아울러 최신의 공공데이터가 개방될 수 있도록 기관별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픈포맷의 비중도 2015년 38.9%에서 2016년 60%, 2017년에는 70%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2-d. 개방표준 제·개정 및 적용 확산

多기관 공통 핵심데이터의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해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개방할 수 있도록 개방표준을 제정하여 보급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은 그동안 같은 종류의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로 제공하는 항목, 형식이 제각각인 데이터를 동일한 기준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것으로, 2014년부터 제정해왔다. 2015년에는 주차장정보, 도시공원정보 등 총 43개 표준 데이터셋이 제정되었으며, 2016년 30개를 추가 제정하고 2017년까지 총 100종을 제정할 예정이다. 표준데이터 등록시 표준적용 준수상태 자가진단을 위한 자동화도구 개발도 추진된다.

③ 시민 참여

3-a. 국민 디자인단 운영 활성화

국민디자인단은 2014년부터 디자인을 정책에 접목하여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국민참여 모델이다.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집행, 평가 및 환류 등 정책과정 전반에 공무원, 국민, 그리고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발, 개선시켜 나가는 정책추진단을 말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국민디자인단을 통해 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민디자인단 Pool을 당초 1,300여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생활안전 등 분야별 디자인과제를 발굴·개선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대학 등과의 협력 및 재능기부와 연계하여 지역주민 참여를 내실화하고 생활과 밀접한 지자체 특화과

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④ 기술과 혁신을 통한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

4-a.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한국의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은 UN 전자정부 평가결과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세계 최고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오고 있다. 최근 전자정부서비스 사용자 환경이 PC에서 다양한 기기의 웹브라우저 이용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그간 Active-X나 특정 브라우저 등 비표준 기술에 의해 제공되는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이 불편하고 접근성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전자정부서비스 보편적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비표준기술의 제거, 모바일 서비스 제공시 호환성 확보 등의 노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적인 비표준 기술에 해당하는 Active-X를 대체 가능한 기술이 있는 경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제거하고 웹 표준기술로의 대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체기술의 안전성과 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대민서비스 분야의 Active-X부터 우선 제거하여 2017년까지 액티브 X-free율을 95% 수준까지 올리며, 국민 불편과 관련 없는 행정내부용 홈페이지의 Active-X는 점진적으로 제거를 추진한다.

4-b. 대국민 서비스포털 통합

복지, 고용, 중소기업지원 등 각 서비스 영역별로 구축·운영되고 있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체계가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통합된다. 제공 부처 중심의 포털구축과 고유의 서비스 분류체계를 적용함에 따라 이용자가 원하는 필요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대국민 온라인 창구를 일원화하고, 각 부처 시스템과의 연계강화를 위해 통합적이고 개방적인 서비스 플랫폼 마련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2016년에 민원24, 정부대표포털, 수혜자맞춤형서비스의 통합이 추진되며 2017년 이후 복지포털·워크넷 등 타 부처 포털과의 연계가 이루어질게 될 것이다.

4-c. 대국민 서비스 알리미 앱 개발·제공

그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한국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노력으로 다양한 정부서비스가 온라인으로 국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기관·사이트별로 분산되어 있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 폰의 보급과 이용이 보편화됨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수단을 통한 정부서비스 제공은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중앙부처·공공기관 등 기관별 핵심 정부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서 국민이 하나의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2016년 중 대국민 서비스 알리미 앱을 개발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정부서비스 정보를 모아 한 곳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개인별 관심과 연령, 거주지역 등을 입력하면 수혜 가능한 정부서비스 정보가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⑤ 반부패 및 공직윤리

5-a.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강화

공공분야의 투명성·청렴성 제고를 위해 2002년부터 공공서비스 유경험자 설문조사와 부패발생 현황자료를 기초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및 부패유발요인을 진단하는 청렴도 조사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부패방지법 제정 시행, 공공기관 부패방지에 관한 조사, 평가 근거 마련 등을 계기로 실질적인 청렴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청렴도 조사에 ‘부정청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⑥ 재정투명성 제고

6-a. 국제원조 정보 공개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가입에 따라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EDCF)에서 개발도상국에 지원 중이거나 지원 예정인 프로젝트 사업 약 740건에 대한 정보를 IATI 요구양식에 맞게 변환하여 공개한다. 우선 기관명, 사업식별자, 사업명, 사업설명 및 현황, 참여기관, 수원지역·분야 등 13개 필수 항목의 공개를 2016년 중 실시하고 이후 필수공개항목에 대한 공개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진하며 향후 ODA 정보 공개 범위 및 참여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6-b. 대국민 ODA 통계정보 접근성 제고

현재 ODA 시행부처 및 기관별 자금형태·원조유형·분야·지역별 지원현황 등 총 지원현황 중심으로 공개되고 있는 ODA 통계정보를 ODA 통계 시스템 개편을 통해 ODA로 지원된 개별 사업의 목적이나 설명, 사업실시 기간이 포함된 세부내역을 국민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V 실행방안

2016년부터 2018년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수립된 제3차 NAP는 1년 단위의 점검과 평가 등 OGP가 제시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제3차 계획에 포함된 이행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정부 내 협력 체계, 그리고 계획의 수립과 추진, 그리고 평가과정에 있어 정부와 민간 간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운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다음과 같은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 내에서는 이행과제별 추진부서 또는 과제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한다. 이 협력 체계를 통해 이행과제의 추진과정과 추진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자체 평가를 통해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확인함은 물론 이행과제 추진에 있어 발생하는 장애요인이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공동 노력이 경주된다.

또한, OGP 활동에 있어 의미 있는 시민참여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정부 대표와 시민사회 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 협의체는 OGP 이행과 관련한 실무자를 포함한 정부대표와 시민사회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다. 협의체는 OGP NAP의 추진상황 및 실적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사회변화에 맞추어 요구되는 추가적인 과제 제안과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소통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 간 정기 간담회,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확대하고, 3차 NAP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다.

1. 공공정보의 적극적 공개		
1-a.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 기관 확대		
신규 / 계속	계속	
착수일 / 종료일	2016년 7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주관 부처	행정자치부	
담당자	정민선	
담당 부서(과) / 직책	공공정보정책과 / 사무관	
이메일	msjeong40@korea.kr	
전화번호	02-2100-3448	
관 련 자	정부부처 / 부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일반국민, 시민단체 등
현황 또는 문제점	정보공개 서비스의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고 관련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2006년부터 도입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 확산함으로써 정보공개청구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온라인 수수료 납부, 다양한 파일 뷰어를 통한 열람 및 다운로드, 정보목록 검색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이용한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들이 아직 남아있어 국민들의 공공정보의 접근이나 이용 상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핵심 목적	정보공개시스템의 확산을 통해 이용자들의 공공정보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추진 계획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중 아직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적용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16년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290개 사립대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관련 OGP 도전과제	a. 공공 서비스 증진 (v) b. 공공 청렴성 증진 (v)	
OGP 가치와의 관련성	a. 정보접근성 (v) b. 시민 참여 (v) c. 책임성 (v)	
기대 성과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정보공개 민원제공으로 국민의 정보접근성과 청구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	
추진 일정	내용	착수일 / 종료일
	사립대학 대상 통합정보공개시스템 확산 및 정보공개포털과의 연계	o '16.7.~'17.12.

2. 공공정보의 적극적 공개		
1-b. 국민 체감형 원문정보 지속적 발굴·제공		
신규 / 계속	계속	
착수일 / 종료일	2016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	
주관 부처	행정자치부	
담당자	정민선	
담당 부서(과) / 직책	공공정보정책과 / 사무관	
이메일	msjeong40@korea.kr	
전화번호	02-2100-3448	
관련자	정부부처 / 부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시민사회 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일반국민, 시민단체 등
현황 또는 문제점	정보공개법 전면 개정, 세계 최초의 원문정보공개시스템 도입, 정보공개대상 기관 확대 등을 통해 정보공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나,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공개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핵심 목적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발굴·제공한다.	
추진 계획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에게 유용한 원문정보를 취합·선정할 계획이며, 원문정보공개에 관한 Best Practice 사례를 전파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관련 OGP 도전과제	a. 공공 서비스 증진 (v) b. 공공 청렴성 증진 (v)	
OGP 가치와의 관련성	a. 정보접근성 (v) b. 시민 참여 (v) c. 책임성 (v)	
기대 성과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정보공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접근성을 높인다.	
추진 일정	내용	착수일 / 종료일
	o 국민체감형 원문정보 조사·선정 o Best Practice 사례 전파 및 홍보 o 대국민 홍보캠페인 실시	o '16.7.~'16.12. o '16.7.~ o '16.12.

1. 공공정보의 적극적 공개		
1-c.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이용 활성화		
신규 / 계속	신규	
착수일 / 종료일	2016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	
주관 부처	행정자치부	
담당자	양명석	
담당 부서(과) / 직책	공공정보정책과 / 사무관	
이메일	ilmoo10@korea.kr	
전화번호	02-2100-3185	
관 련 자	정부부처 / 부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일반국민, 시민단체 등
현황 또는 문제점	각 기관이 통일된 기준 없이 주관적으로 정보를 선정·공표함에 따라 초래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하며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15년 12월 현재 표준모델공표 이행율이 평균 49.6%에 불과하다.	
핵심 목적	국민들이 이해, 접근, 활용하기 쉽도록 공개되는 정보를 표준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인다.	
추진 계획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들의 항목, 내용 등을 일관성 있게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공표 이행을 연차적으로 향상시킨다. 특히, 2015년 말 현재 49.6%의 머물러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공표 이행율을 2016년 말까지 55%로 개선시킨다.	
관련 OGP 도전과제	a. 공공 서비스 증진 (v) b. 공공 청렴성 증진 (v)	
OGP 가치와의 관련성	a. 정보접근성 (v) c. 책임성 (v)	
기대 성과	o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선제적·능동적 공개 확대로 행정 투명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활성화를 기대 할 수 있다.	
추진 일정	내용	착수일 / 종료일
	o 표준모델 공표 이행율을 기관평가항목으로 관리	o '16.7~

2. 공공데이터 개방		
2-a. 고수요·고가치 국가 중점데이터 조기 개방		
신규 / 계속	신규	
착수일 / 종료일	2016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	
주관 부처	행정자치부	
담당자	송희라	
담당 부서(과) / 직책	공공정보정책과 / 사무관	
이메일	lapaella@korea.kr	
전화번호	02-2100-3453	
관련자	정부부처 / 부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시민사회 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일반 국민, 민간단체, 대학생 등 전 국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개발자, 창업기업 및 데이터 관련 산업
현황 또는 문제점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촉진을 위해 36개 분야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방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분야의 경우 민간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관계로 조기개방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핵심 목적	고수요 고가치 데이터는 조기개방을 통해서 개방효과를 극대화하고,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환경을 조기에 마련한다.	
추진 계획	2015년 개방된 11개 분야 이외에 25개 분야는 당초, 2017년까지 개방 예정이었으나, 민간 수요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도로명주소, 부동산거래정보 등 22개 분야 데이터는 2016년에 조기개방을 추진한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조기 개방이 어려운 국세청의 국세정보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는 2017년 중 개방을 목표로 하고 판결문정보는 대법원과의 협의·조정을 거쳐 개방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OGP 도전과제	a. 공공 서비스 증진 (v)	
OGP 가치와의 관련성	a. 정보접근성 (v) b. 시민 참여 (v) d. 기술과 혁신 (v)	
기대 성과	조기 데이터 개방으로 민간 등의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를 충족시킨다.	
추진 일정	내용	착수일 / 종료일
	o 22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 조기 개방 o 국세정보 및 사회보장정보 개방 추진	o '16.7~12 o '17.1~'17.12

2. 공공데이터 개방		
2-b.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 추진		
신규 / 계속	신규	
착수일 / 종료일	2016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	
주관 부처	행정자치부	
담당자	송희라	
담당 부서(과) / 직책	공공정보정책과 / 사무관	
이메일	lapaella@korea.kr	
전화번호	02-2100-3453	
관련자	정부부처 / 부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시민사회 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현황 또는 문제점	공공데이터 개방은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 부족 및 품질 낮은 데이터 개방은 활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핵심 목적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도입을 통해 민간이 신규서비스 개발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한다.	
추진 계획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용량 공공데이터 대상으로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한다. 2016년 21개, 2017년 42개, 그리고 2018년은 주요 핵심데이터를 대상으로 수준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며 데이터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영역별·프로세스별 평가항목(36개)을 구성하여 이행수준을 평가하고,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의 시정조치를 점검하며, 개선 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품질관리 등급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으로 품질관리 등급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한 평가 추진체계 운영절차, 시정조치 절차 등 세부 시행 지침·가이드를 마련한다.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우수인력 선발·교육을 통한 전문심사원을 양성할 계획이다.	
관련 OGP 도전과제	a. 공공 서비스 증진 (v) c. 공공재의 관리 효율성 증대 (v)	
OGP 가치와의 관련성	a. 정보접근성 (v) b. 시민 참여 (v) d. 기술과 혁신 (v)	
기대 성과	적정 수준의 공공데이터 품질확보를 통한 민간 활용도를 제고하고, 민간 수요가 높고 융·복합 서비스 창출이 용이한 개방형·표준형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민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추진 일정	내용	착수일 / 종료일
	o 품질 수준 평가제 추진 o 추진체계 정비 및 심사원 양성	o '16.7~'17.12 o '16.7~'17.12

2. 공공데이터 개방		
2-c. 가공·활용이 자유로운 오픈포맷 확대		
신규 / 계속	신규	
착수일 / 종료일	2016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	
주관 부처	행정자치부	
담당자	송희라	
담당 부서(과) / 직책	공공정보정책과 / 사무관	
이메일	lapaella@korea.kr	
전화번호	02-2100-3453	
관련자	정부부처 / 부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시민사회 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현황 또는 문제점	소프트웨어(훈글, 엑셀)에서만 구동되는 데이터는 오픈포맷 전환 등록을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오픈포맷 방식으로 데이터 개방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2015년 말 기준으로 오픈포맷 형태의 데이터 개방률이 38.9%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핵심 목적	오픈포맷 확대를 통해 데이터 활용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추진 계획	2015년 현재 38.9%에 머무르고 있는 오픈포맷 데이터 개방률을 2017년에 70%까지 확대하는 등 전체 개방 데이터 중 오픈포맷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간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 등록할 때 기존 가공이 불가(PDF)하거나, 특정 소프트웨어(훈글, 엑셀)에서만 구동되는 데이터는 오픈포맷 전환 등록을 유도하며, 신규 개방데이터는 오픈포맷으로 등록하도록 심사기준 강화한다. 아울러 공공데이터포털 내 오픈포맷(XLS→CSV) 자동 전환도구도 개발하여 제공하며, 기관별 개방데이터 제공 포맷 현황을 측정·평가하여 자발적으로 오픈포맷 개방을 유도한다.	
관련 OGP 도전과제	a. 공공 서비스 증진 (v) c. 공공재의 관리 효율성 증대 (v)	
OGP 가치와의 관련성	a. 정보접근성 (v) b. 시민 참여 (v) d. 기술과 혁신 (v)	
기대 성과	데이터 활용성 증대를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추진 일정	내용	착수일 / 종료일
	o 등록심사 강화 o 자동전환 도구개발	o '16.7~ o '16.7~12

2. 공공데이터 개방		
2-d. 개방표준 제·개정 및 적용 확산		
신규 / 계속	신규	
착수일 / 종료일	2016년 7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주관 부처	행정자치부	
담당자	송희라	
담당 부서(과) / 직책	공공정보정책과 / 사무관	
이메일	lapaella@korea.kr	
전화번호	02-2100-3453	
관련자	정부부처 / 부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시민사회 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현황 또는 문제점	기관별로 개방한 데이터가 같은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제공항목과 형식이 제각각으로 제공되어 활용을 위해 해당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정제·가공해야 하는 등 활용을 제약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핵심 목적	각 지역 기관 단위로 생성되는 같은 종류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기준을 통일하여 개방함으로써 전국 단위 서비스를 실현하고 민간 활용성을 높인다.	
추진 계획	여러기관이 보유한 공통 데이터의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해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개방해야 할 핵심 데이터를 선정하고 2017년까지 100개의 개방 표준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데이터 포털에의 표준데이터 등록시 자가진단을 위한 자동화 도구도 개발될 예정이다.	
관련 OGP 도전과제	a. 공공 서비스 증진 (v) c. 공공재의 관리 효율성 증대 (v)	
OGP 가치와의 관련성	a. 정보접근성 (v) b. 시민 참여 (v) d. 기술과 혁신 (v)	
기대 성과	표준화된 형태의 데이터 개방 확대로, 데이터 활용시(응·복합 등) 가공 비용 절감하는 등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용이하게 지원한다.	
추진 일정	내용	착수일 / 종료일
	o 개방 표준제정 100개(누적) o 표준데이터 자가진단 자동화도구 개발적용	o '16.7~'17.12 o '16.7~

3. 시민 참여		
3-a. 국민 디자인단 운영 활성화		
신규 / 계속	계속	
착수일 / 종료일	2016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	
주관 부처	행정자치부	
담당자	김영숙	
담당 부서(과) / 직책	국민참여정책과 / 사무관	
이메일	gskim5810@korea.kr	
전화번호	02-2100-3466	
관련자	정부부처 / 부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공무원, 디자이너, 일반시민 등 7명 내외로 정부3.0국민디자인단(워킹그룹)을 구성하여 프로젝트 진행
현황 또는 문제점	국민디자인단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시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구상하는 국민 참여형 정책운영 모델이다. 2014년에 시범 도입한 이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1,300여명의 시민 등이 참여하여 240여 개의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한바 있다. 그 결과, 2016년 2월 세계 3대 디자인 상의 하나로 꼽히는 「iF 디자인 어워드 2016」에서 서비스디자인 부문 금상을 수상하였다. 이에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새로운 정책기획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 및 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디자인과제 참여자의 공공서비스디자인에 대한 이해 부족, 서비스디자인 전문인력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핵심 목적	o 국민이 정책 과정 전반에 직접 참여해 국민관점의 서비스 설계 및 정책 고객 확대	
추진 계획	o 국민디자인단 구성 및 디자인 과제 추진(총 382개 ~'16.12) o 지자체 국민디자인단 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o 국민디자인단 pool 확대('16.7~)	
관련 OGP 도전과제	a. 공공 서비스 증진 (v)	
OGP 가치와의 관련성	b. 시민 참여 (v)	
기대 성과	o 정책 전 과정에 국민참여 활성화로 '수요자중심 정부' 구현, 고객(국민) 만족도 향상, 정부신뢰도 제고 등	
추진 일정	내용	착수일 / 종료일
	o 총 382개 국민디자인과제 추진중(중앙 44. 지방 338) o 2016. 성과공유대회 개최 o 국민디자인단 Pool 확대	o '16. 5~ 11.30 o '16. 12.2 o '16.7~

4. 기술과 혁신을 통한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		
4-a.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신규 / 계속	신규	
착수일 / 종료일	2016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	
주관 부처	행정자치부	
담당자		
담당 부서(과) / 직책		
이메일		
전화번호		
관련자	정부부처 / 부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민사회 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전 국민 서비스 이용자
현황 또는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시 Active-X라는 비표준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어 이용자들에게 특정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 편중과 해킹 등 보안에 취약한 표준화되지 않은 기술로 지속적으로 불편을 초래하였다. 또한, 현재 Active-X 이용은 점차 축소되고 웹 표준(HTML5)이 향후 확산될 전망으로 Active-X 제거를 통한 이용개선이 필요하다.	
핵심 목적	행정-공공기관 홈페이지의 Active-X 제거 및 대체기술 적용 지원 등 혁신을 통한 서비스 이용환경을 개선하여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추진 계획	대민서비스 분야의 Active-X를 우선 제거하고자, 2016년 Active-X제거 홈페이지수를 1,638개 홈페이지 3,321개의 Active-X를 제거하고, Active-X Free 달성률을 88.1%로 목표로 하며, 2017년에는 나머지 844개 홈페이지의 2,161개를 제거하여 95.1%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내부용 홈페이지의 경우 점진적으로 제거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관련 OGP 도전과제	a. 공공 서비스 증진 (√)	
OGP 가치와의 관련성	a. 정보접근성 (√) b. 시민 참여 (√) d. 기술과 혁신 (√)	
기대 성과	대민서비스 홈페이지의 Active-X를 제거하고 웹 표준(HTML5) 기술적용을 통해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시 플러그인 설치 등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홈페이지의 웹 호환성 및 보안성 개선으로 국민의 웹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추진 일정	내용	착수일 / 종료일
	o Active-X 제거의 단계적 추진 및 기관별 제거 o Active-X 대체기술 적용지원	o '16년.7월~'18년.6월 o '17년.12월~'18년.6월

4. 기술과 혁신을 통한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		
4-b. 대국민 서비스포털 통합		
신규 / 계속	신규	
착수일 / 종료일	2016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	
주관 부처	행정자치부	
담당자	하용재	
담당 부서(과) / 직책	행정정보서비스통합추진단 / 주무관	
이메일		
전화번호	02-2100-4215	
관련자	정부부처 / 부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
	시민사회 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대한민국 전 국민
현황 또는 문제점	복지, 고용, 중소기업 등 대국민온라인 서비스가 서비스 영역별로 구축·운영됨에 따라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나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핵심 목적	범정부 차원의 대국민 온라인서비스를 일원화 하고 개별시스템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추진 계획	현재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핵심이 되는 3개 시스템(정부포털+맞춤형혜택안내+민원24)을 우선적으로 통합하고 2017년 이후 복지로, 워크넷 등 부문별 서비스포털과의 통합·연계를 추진한다.	
관련 OGP 도전과제	a. 공공 서비스 증진 (v)	
OGP 가치와의 관련성	a. 정보접근성 (v) d. 기술과 혁신 (v)	
기대 성과	국민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번거롭게 요청하던 방식에서, 한곳만 방문하면 필요한 정부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개발 하여 제공한다.	
추진 일정	내용	착수일 / 종료일
	o 행정정보서비스 통합포털 구축 o 부문별 서비스포털과의 통합·연계 추진	o '16.7~ / ~'18.6 o '18.1~

4. 기술과 혁신을 통한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		
4-c. 대국민서비스 알리미 개발·제공		
신규 / 계속	신규	
착수일 / 종료일	2016년 7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주관 부처	행정자치부	
담당자	이효순	
담당 부서(과) / 직책	창조정부기획과/ 사무관	
이메일	leehs30@korea.kr	
전화번호	02-2100-3418	
관 련 자	정부부처 / 부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현황 또는 문제점	그간 다양한 정부서비스가 마련되었으나, 국민이 이를 다 알 수 없고 기관·사이트별로 분산되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려움에 따라, 중앙부처·공공기관 등 기관별 핵심 정부서비스를 국민이 하나의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194개 핵심 정부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손쉽게 이용하도록 한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을 2016년 08월 19일부터 출시한다.	
핵심 목적	중앙부처·공공기관 등 기관별 핵심 정부서비스를 국민이 하나의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였고, 국민의 서비스 이용 체계(패러다임)가 '모바일 우선주의(모바일 퍼스트)'로 변화함에 따라 '손끝으로 만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모바일 환경으로 개발하여 국민에게 편리한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추진 계획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은 스마트폰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3.0 서비스 알리미'에 포함된 194개 정부서비스는 국민이용 건수, 모바일 이용환경 개선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핵심서비스만 선별·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정부서비스로 개선·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OGP 도전과제	a. 공공 서비스 증진 (v)	
OGP 가치와의 관련성	a. 정보접근성 (v)	
	b. 시민 참여 (v) d. 기술과 혁신 (v)	
기대 성과	국민이용 건수, 모바일 이용환경 개선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핵심서비스만 선별·제공하여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정부서비스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 일정	내용	착수일 / 종료일
	대국민서비스 알리미 서비스 제공	o 2016.08~

5. 반부패 및 공직 윤리		
5-a.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강화		
신규 / 계속	신규	
착수일 / 종료일	2016년 3월 3일 / 2018년 6월 30일	
주관 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	박은령	
담당 부서(과) / 직책	청렴조사평가과 / 사무관	
이메일	fidelis@korea.kr	
전화번호	044-200-7632	
관련자	정부부처 / 부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시민사회 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각급 공공기관 유관단체 ※ 기관별 청렴도 측정 시 평가자로 참여
현황 또는 문제점	공공분야의 투명성·청렴성 제고를 위해 2002년부터 공공서비스 유경험자 설문조사와 부패발생 현황자료를 기초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및 부패유발요인을 진단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실질적인 청렴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핵심 목적	공공기관 부패방지에 관한 조사 및 평가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각 기관의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조성 노력을 유도한다.	
추진 계획	부패방지법 제정 시행, 공공기관 부패방지에 관한 조사, 평가 근거 마련 등을 계기로 청렴도 조사에 '부정청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다. 청렴도 조사 결과에 관해서는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관련 OGP 도전과제	a. 공공 서비스 증진 (√) b. 공공 청렴성 증진 (√)	
OGP 가치와의 관련성	a. 정보접근성 (√) b. 시민 참여 (√) c. 책임성 (√)	
기대 성과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청렴수준을 제고한다.	
추진 일정	내용	착수일 / 종료일
	o 청렴도 조사에 부정청탁 반영 o 청렴도 측정 결과 인터넷 공개	o '16.9월 ~ o '16.7월 ~

6. 재정투명성 제고		
6-a. 국제원조 정보 공개		
신규 / 계속	신규	
착수일 / 종료일	2016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	
주관 부처	국무조정실(수출입은행)	
담당자	맹준호 서기관 (정책연구팀 책임심사역)	
담당 부서(과) / 직책	개발협력정책관실 (경협총괄부)	
이메일	maeng@pmo.go.kr (jhjeong@koreaexim.go.kr)	
전화번호	044-200-2153 (02-3779-6608)	
관련자	정부부처 / 부서	외교부 / 개발정책과, 기획재정부 / 개발협력과
	시민사회 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현황 또는 문제점	2015년 12월, 한국 정부는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공여국, 국제기구, 민간기관 등이 참여하여 원조사업관련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성 증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국제원조투명성기구에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IATI가 제시하는 공통의 정보공개 기준에 의해 ODA지원 실적, 향후 지원 계획, 국별 지원 전략 등에 관한 정보를 국별 자체 웹사이트와 IATI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핵심 목적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앞 우리나라 ODA 사업정보 공개함으로써 ODA 사업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수원국의 예측가능성 담보를 통한 개발효과성 제고 및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의 효과를 거두도록 한다.	
추진 계획	1차적으로 KOICA와 EDCF에서 개발도상국에 지원 중이거나 지원 예정인 약 740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IATI가 선정한 39개 공개항목 중 13개 필수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추진한다. 이후 나머지 공개항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연차적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한다.	
관련 OGP 도전과제	a. 공공 서비스 증진 (√) c. 공공재의 관리 효율성 증대 (√)	
OGP 가치와의 관련성	a. 정보접근성 (√) b. 시민 참여 (√)	
기대 성과	ODA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활용 등이 가능하다.	
추진 일정	내용	착수일 / 종료일
	o IATI 지정 필수 항목 공개 o 공개대상 사업 및 항목 확대	o '16년.7월~12월 o '17년 ~

6. 재정투명성 제고		
6-b. 대국민 ODA 통계정보 접근성 제고		
신규 / 계속	신규	
착수일 / 종료일	2016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	
주관 부처	국무조정실 (수출입은행)	
담당자	김하연 전문위원 (정책연구팀 책임심사역)	
담당 부서(과) / 직책	개발협력정책관실 (경협총괄부)	
이메일	hayeonkim@pmo.go.kr (jhjeong@koreaexim.go.kr)	
전화번호	044-200-2159 (02-3779-6608)	
관련자	정부부처 / 부서	외교부 / 개발정책과, 기획재정부 / 개발협력과
	시민사회 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통계작업반(WP-STAT)
현황 또는 문제점	현재 ODA 시행부처 및 기관별 자금형태, 원조유형, 분야·지역별 지원현황 등에 관한 통계를 서비스하는 ODA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나, 총 지원현황 중심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관계로 세부적인 내용을 국민들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핵심 목적	ODA 사업 집행의 투명성 제고하고 관련 통계정보를 활용하여 지원전략이나 해외진출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	
추진 계획	ODA로 지원되는 개별사업의 목적이나 설명, 사업실시 기간 등이 포함된 세부내역과 통계제공이 가능하도록 ODA통계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관련 OGP 도전과제	a. 공공 서비스 증진 (√) c. 공공재의 관리 효율성 증대 (√)	
OGP 가치와의 관련성	a. 정보접근성 (√) b. 시민 참여 (√)	
기대 성과	국내 이해관계자 앞 ODA 사업 관련 정보접근성 확대를 통해 대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며, 해외원조에 대한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추진 일정	내용	착수일 / 종료일
	o ODA 통계시스템 개편	o '16년.12월~'17년.4월